

MB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?

발행일 | 2010년 2월 17일

장 소 | 참여연대 느티나무홀

제 작 |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

* 본 자료는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, 개인 학습용으로만 사용하시고, 재인용을 금지합니다. 자료이용에 대한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(02-723-5052)로 해 주십시오

MB금융정책 무엇이 문제인가?

전성인 /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
I. MB정부의 행보

1. 금융관련 분야 정부조직 개편

- 기획예산처+재정경제부+금감위원회 => 기획재정부+금융위
 - 공공부분 효율성 제고, 금융정책을 둘러싼 재경부와 금감위간의 갈등 치유 위함
 - 기획재정부 규모 과도하게 커져, 금융정책 권한 금융위로 이관
 - 외환 정책 권한은 기재부 존치
- 금융위원회의 비대화
 - 금융정책과 감독을 망라하는 권한 갖게 됨
 - 금감원, 예금보험공사(재경부 산하에서 이관), 정책금융공사(신설), 자산관리공사 통합
 - 공무원조직 팽창, 관치금융 종식과는 거리 먼 조직개편
- 금융감독구조의 후퇴
 - 커진 규모에 비해 금융 감독 역량은 후퇴했다는 평가
 - 2008년 외환위기 때 외환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간의 불협화음 조짐
 -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 심화, 정보교류 교착
 - 예금보험공사의 종속으로 금융기관 감독 실패 책임 물을 수 없게 됨
 -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권한에 감독실패 후 처리하는 권한까지 갖게 됨

2. 금산분리완화

- 금산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안
- 금융정책 관련해서 참여정부와 현재 한나라당의 정책과는 큰 차이 없어
- MB정부 들어서 보수정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늘어 은행법,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됨
- 은행법,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
- 산업자본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제범위를 축소하고, 은행소유 범위 확대로 규제범위 축소
- 은행 소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은행법과 같은 규제를 축소
-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비은행 자회사 보유 허용
- 은행법,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 이유
- 공정거래법 상의 금산분리 법 완화를 위한 테스트케이스
- 삼성생명 관련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
- 정부의 미국도 금산 분리 완화 했다는 주장은 거짓 오바마 금융개혁안에 금산분리 유지내지 강화한다는 문구 명시, 미국은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은행과 같은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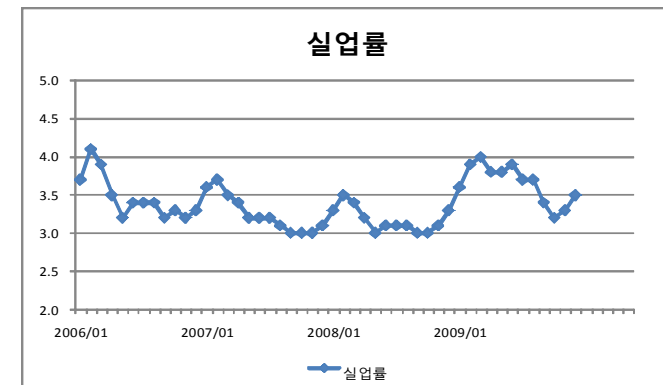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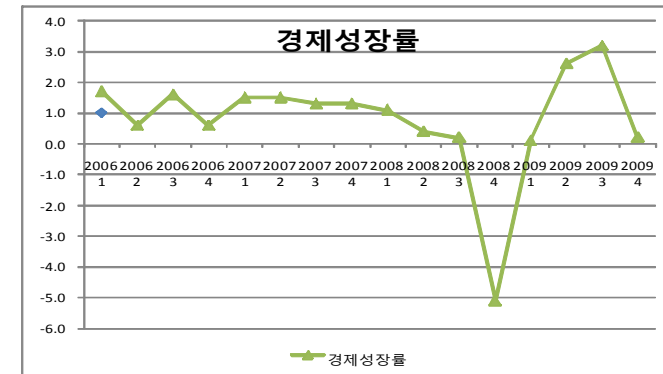
3. 산업은행 민영화

- 산업은행 민영화의 핵심
- 기존 산업은행 중 정책금융 담당부분을 정책금융공사로 만들어 내 보내고, 나머지는 산은지주 회사 만들어서 민영화 하겠다는 것
- 정책금융공사
- 정책금융공사는 최소비용의 원칙 없이 정책금융의 제공, 금융기관 공적자금 지원 기능을 함
- 더불어 정책금융공사의 감독을 금융기관 감독실패에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하게 됨
- 산은지주회사 민영화
- IB(investment bank)로 육성하겠다는 생각, 산하에 있는 대우증권 민영화 하는 것이 쉬운 길
-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으로 IB가 꼽힘, 이후 산은을 IB 하겠다는 주장 어려워 짐
- IB가 어려워지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합한 형태의 CIB 하겠다고 주장함
-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역할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를 허락해줌
- 민영화 될 산업은행이 여전히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음

II. 우리경제는 어떤 경로를 거쳤나?

1. 경제성장률과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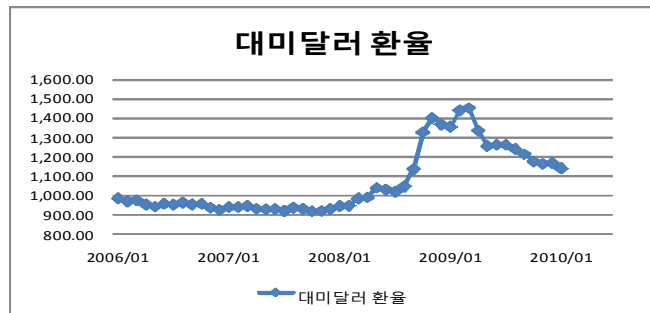
- 경제성장은 빠르게 회복
-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률 차원에서 많이 회복됨 그러나 고용회복은 미미함.
- 외화유동성이 복원되고 확장 재정정책을 썼던 결과



2. 금융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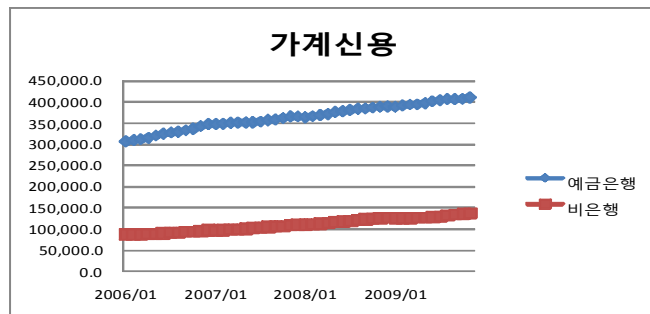
○ 환율, 주가 회복

- 환율은 급격한 절하와 절상 거쳐 회복국면에 들어섬
- 2006년 900~1000원 선이었던 환율이 최근 1500원 까지 상승, 여전히 상당한 원화가치 절하
- 원화가치가 절하되면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됨, 수입품 소비하는 소비자엔 불이익
- 실질소득(GNI) 여전히 마이너스(-), 성장과 소득의 괴리 심해짐
- 주가는 급속한 하락 후 회복하는 추세, 이전의 주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임



○ 가계대출의 급팽창

- 가계 대출은 위기 전후를 거쳐 지속적으로 부담 요인
- 금리인상 대신 LTV, DTI 등 양적 통제 수단으로 조절 중
- 개인회생절차 개정 작업 지지부진
- 소득으로 이자 갚기가 어려워지니 신용카드 판매신용, 카드론 신용대출, 저축은행 대출 등 비은행 대출이 급격히 늘어남.



III. 해외에서는 어떤 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는가?

1. 건전성 감독의 강화

○ Safe and sound banking, Prudential Regulation

- 금융기관은 신중하게 행동해서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.

○ 자기 자본 규제 강화

- BIS 자기자본 비율 그 자체의 상승 (8% => 12% ~ 15%)
- 자기자본 중 기초 자기자본(tier 1 capital)의 비중 강화
- 경기순환을 감안한 자기자본 규제 은행이 호황기 때 지나친 대출을 하거나, 불황기 때 대출을 너무 줄이거나 하는 것 등의 폐해 막고자 함. 즉, 호황기에 규제 강화, 불황기에 규제 완화

2.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

○ 체제적 위험(systemic risk)에 대한 감독 강화

- 체제적으로 중요 : 해당기관 · 거래가 잘못되면 금융시스템에 큰 위험을 주는 경우를 뜻 함
- SII(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), SITI(systemically important transactions)
- Tier 1 FHC(financial holding company): 비은행 지주회사도 잠재적 대상
- 그러나 규제의 대상과 주체, 감독 방향은 아직 미정

3. 금융 감독 구조의 개편

○ 규제의 사각지대 봉쇄

- 유사은행업(shadow banking) 규제
-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-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

4. Vokler Rule

○ 2010.1.21. 금융개혁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 특별 회견

- 은행,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규제

- 금융 산업의 과점화 규제
- 은행이 무리수 두지 않고 더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가해야겠다는 공감대는 형성
- 공화당 상화 양원에서 동의치 않아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

IV.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?

1.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

-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주요 원인
- 근래 미국의 위기는 미국 내 허술한 금융 감독이 문제
- 그러나 이 위기가 개방된 자본시장을 통해 한국으로 급격하게 전이
-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고갈됨으로써 금융시장 경색
- 중앙은행간 혹은 중앙은행-IMF 간 통화 스왑 협정이 해법
- 지난 금융위기 때 한국 외환보유액 2000억불 넘었음에도 외환유동성 위기 안정되지 않아
- 미국 Fed와 300억불 통화스와프 협정이 지난 외환위기 과정을 결정적으로 반전시킴
- 외환보유액 축적은 강요된 저축(forced saving)이고 정작 위기 시에는 무용지물
-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
- 외환에 대한 무제한적 발권력을 보유한 국가의 명시적 back-up 의사표시가 최선

2.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

- 거대 금융기관/거대 금산복합체에 대한 규제 확립 절실
- 단일 금융지주회사/거대 생보사의 붕괴는 체제적 위험 야기
- 대형화 추구, 거대 금산복합체 허용은 이런 위험 가중
- 규제 대상, 규제 주체, 규제 방식에 대한 해법 도출 시급

3. 감독기구의 재정비

- 감독구조 재편의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출처에서 제기
- 외환위기 과정에서 외환정책과 감독 정책의 분리 문제점 대두
- 한국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감독권 범위 논란

-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논의로 통합 금융 감독에 대한 재고 필요성 제기

- 감독구조 개편의 몇 가지 기본 원칙
-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: 정부는 마지막에 등장, 민간은 위임 권한 행사
- 민간 감독기구의 권한 배분: 유인부합적 구조(incentive compatible structure)
- 시장 규율 효율화: 집단소송제의 실질적 확대

- 가계 부채의 정비
- DII로는 가계부채 정비가 힘들, 퇴로 없는 무차별적 금리인상은 위험.
- 금리인상 하되, 개인회생절차를 정비해야 함.
- 개인회생절차 기간을 줄이고, 집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방안 모색 필요
- 부실화된 주택담보대출 중에 개인회생절차 통하면서 집을 담보로 채권변제 하려고 했던 은행들의 뒤편은 정부가 부실채권 매입하듯이 사서 은행에게 적당한 선에서 변제해주고 개인에게는 장기모기지로 상환케 하는 방안 있을 수 있음
- 파산은 여러 가지 낙인이 찍힐 뿐 아니라 생산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함



참여연대

정부지원금 0%,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

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

회원가입 02-723-4251 www.peoplepower21.org

시민경제위원회 02-723-5052 blog.peoplepower21.org/economy